

'예외 국가'의 제도화 : 군사 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류길재(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정치학)

1. 서론

작년 9월 11일 김용순 노동당 비서의 서울 방문시 인민군 총정치국 부총국장인 박재경 대장이 동행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가 이른바 김정일의 군부 내 '실세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 이후 진전되었음에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라는 군사적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나 성과가 없었던 터라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물인 송이버섯을 전달하는 전령사의 역할만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당일 오후 북으로 돌아갔다.¹⁾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은 "위대한 령도자

1) 우리 정부가 이 자리에서 조성태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시도하여 간단한 만남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면담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더는 데 기여하는 성격으로 발전하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선물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박재경 대장이” 전달했으며, 이어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와 그 일행이 참가했다”고 발표하였다.²⁾ (이텔릭은 인용자) 어차피 방문하게 되어 있던 ‘당 측근’인 김용순을 통하지 않고 굳이 박재경이라는 ‘군부 측근’을 통해 김정일의 선물을 전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한 이 방송 보도에만 따르면 북한의 인민들에게 김용순 비서는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식’에 배석한 인물로 비치도록 되어 있다.³⁾ 즉 김정일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에, 그것도 북한 고위층 인사들이 남한을 방문하는 흔치않은 자리에 군부 인사를 굳이 내보냄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

이와 관련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은 위 사건이 있는 직후 9월 27일 열린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특사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북한 대미 외교의 핵심으로 간주되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거명되었으나 군부 인사이며, 군내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조명록이 미국으로 간 것이다. 도대체 (강석주가 아닌) 조명록이 미국에 간 까닭은 무엇인가? 좀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왜 ‘군인’이 갔는가? 미국과 북한간에는 아직도 정전협정의 두 당사자로서 전쟁상태에 있는 적대적 관계가 놓여있다. 그동안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시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즐기차게 주장해 왔던 터였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자신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에 고위당국자를 보낼 수 없다던 태도를 단순히

지는 못했다.

2) 『연합뉴스』, 2000년 9월 21일.

3) 김용순과 임동원 국정원장 간의 회담 합의 내용은 9월 14일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되었고, 북한에서는 당일 이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반복 보도함으로써 김용순 일행의 서울 방문이 단지 박재경의 선물 전달식 배석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자세의 대반전을 보여 주었으며, 그 대반전의 핵은 바로 조명록이라는 북한 군부 ‘핵심’의 방미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오늘날 북한에서 군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해석도 가능하다. 첫째, 북한이 군사적 적대 관계에 있는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 군을 통한 시위적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⁴⁾ 둘째, 박재경의 경우 남한에 전달한 버섯을 채취한 주체가 인민군이기 때문에 인민군 총정치국 부총국장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인 그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군이 군인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동안 북한의 군이 국가를 방위하는 역할을 넘어서 ‘수령’을 보위하는 정치적인 역할과 경제 건설에 수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경제 건설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상식화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단지 군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은 김일성 사망 이후 군의 위상 강화에 이어 당-군 관계에서도 심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또는 이미 발생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군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고 다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당을 대체했다는 식의 관찰은 적절하지 않으며, 최소한 “아직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우리 학계에 주조를 이룬다.

그러나 위 두 사건은 북한의 군대가 단순히 역할의 다변화만을 보여주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최고 통치자인 김정일의 권위를 대신하는 고도의 통치 행위를 군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후자는 북한 국가의 외교적 대표행위를 역

4) 조명록이 클린턴 면담시 군이 군복을 착용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시 군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국가가 적어도 대외적으로 군사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내적으로는 어떠한가? 대내적으로도 군사주의적 담론이 전사회적으로 유포되어 있으며, 인민들은 “군대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군대문화가 일반 사회 속으로 삼투하여 군과 사회의 구분이 파편화되어 있다.

이 글은 김정일 정권 하 북한의 국가가 군사 국가화 되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사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시형 국가 병영관리’, ‘전시체제적 사회주의의 강화’, ‘유사전시체제화’, ‘군 중심의 비상 관리체제’, ‘군부통치 국가’, ‘당·군 융합체제’ 등의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⁵⁾ 양현수는 이러한 개념들을 크게 보아 ‘군사 국가화 논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존의 논의에서 북한의 군사 국가화 주장은 군의 역할이 다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의 권위와 권한이 증대하여 당의 위상을 위협하거나 이미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군사 국가화 경향이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외적 환경의 변화와 경제난으로 비롯된 국가 위기 국면에서 군에 의존하여 체제안보를 지탱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사 국가화가 군의 역할 다변화와 당에 대한 군의 우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에 대한 조직으로서의 군대의 위상 강화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논박되었다.⁶⁾

따라서 군사 국가화 논의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보

5) 양현수, “김정일 시대의 조선인민군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비평”(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원고, 1999년 9월 18일).

6)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 제7권 3호(2001).

다는 좀더 넓은 의미의 체제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즉, 북한 정치체제의 변용이라는 맥락에서 군대의 역할 변화와 사회적 차원에서 군사주의적 담론이 갖는 포괄성을 언급해야 한다. 지금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군사 국가화 논의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당-군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봐서는 그 본질적인 성격을 조망하지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 북한 국가의 군사주의화가 갖는 의미가 북한 정치를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매우 필요한 유용성을 제공한다.⁷⁾

이 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군사 국가의 정의와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군사 국가를 구성하는 담론의 영역과 정책 결정의 영역을 각각 검토함으로써 북한 군사 국가화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를 군사 국가로 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의미에 대해 개진하고자 한다.

2. 유기적 위기와 군사 국가

1) 기존 군사 국가화 논의의 부적절성

기존 북한 군사 국가화 논의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인민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했다는 것, 이에 반해 노동당의 권력은 약화되었다는 것,

7) 과학은 현실을 위해 복무한다. 비록 과학이 제시하는 가설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현실을 설명하는 설득력을 갖는다면 그 보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당보다 군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 그 결과 북한 정치체제는 군-당체제, 또는 당-군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군대 현지지도의 증가, 군의 역할 다변화와 확대, '선군정치'와 같은 군 중심체제 이데올로기의 강화, 주석단 및 권력 서열에서의 군간부들의 부상, 최고 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통치의 전면화 등이다.⁸⁾ 요컨대 이들은 당-군 관계 또는 당/군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즉, 군의 권위와 권한이 증대함으로써 당의 그것들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이 군 간부들과 밀착하여 현지지도를 할 때 이들을 대동한다거나, 당간부들에게 군대의 사업작풍을 본받으라고 질타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당-군 관계가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는 더 이상 당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당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당을 대신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집단의 위상까지 획득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군사 국가화의 개념들은 이들이 볼 때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북한체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당의 영도적 역할'이 지상 명령과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사회이다.⁹⁾ 특히 군내에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당조직이 거미줄과 같이 퍼져있으면서 감시와 통제를 행하기 때문에 군이 당의 권위나 권한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김정일이 대동하고 다닌 당간부들도 실상은 군내의 정치 사업을 담당하는 당간부들이며, 김정일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군내의 당사업 방식이라는 사실이다.¹⁰⁾ 따라서 위와 같은 근거만으로 북한이 군사 국가

8)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11쪽.

9)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 정치'와 당·군 관계”, 52쪽.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작성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이명우, “김정일체제하의 당·군관계에 관한 연구”(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를 참조할 것.

화되고 있음을 주장하면 설득력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당과 군의 관계에서 당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주장 역시 현재 북한의 정치 현상을 보는 데 적절치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 연구자는 오늘날의 북한이 군사 국가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군사 국가는 사회체제의 동원화와 일상화된 부대의식(部隊儀式)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병영 국가의 성격 위에 군대가 제반 비국방 분야의 운용에도 직접 나선다는 특징을 더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가 볼 때 “군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 기형적 상황이 전개되면서 자연스럽게 군의 위상도 강화되었다”고 한다. 나아가서 그는 이러한 군사 국가화의 경향이 1998년에 들어서서 “하나의 제도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이텔릭은 인용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부 세계에서는 마치 군이 당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군대는 당의 군대이며, 군대가 당을 대체하거나 그 우위에 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¹¹⁾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군사 국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군의 위상은 강화되었는데, 여전히 군은 당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군의 위상이 과거에 그만큼 낮았다는 것인지, 군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마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과 마찬가지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는 1998년에 쓴 다른 글에서 이러한 군사 국가화 경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데 그 이유는 “군사 국가의 추구만으로 가중되는 경제난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병영 밖의 사회·행정 분야 등에까지 진

10) 양현수, “김정일 시대의 조선인민군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비평”, 4~7쪽; 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이종석·백학순 공저,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19쪽.

11) 이종석, 위의 글, 16~19쪽.

출해 있는 군의 깃발이 점차 부대 안으로 철수할 것이며, 이는 분명히 군부의 위상을 정상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¹²⁾ 말하자면 기형적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의 제도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언명과는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¹³⁾

이러한 혼란은 북한의 군사 국가화 논지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이나 이를 비판하는 연구자들 모두에게 당-군 관계를 갈등의 대립항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당-국가 체제에서라면 군이 당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군 내에 포진하고 있는 정치군인(정치위원)들과 당세포 조직, 중앙 조직으로서의 총정치국 등이 군대 내에서 당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충성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공산 국가에서도 쿠데타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여실히 입증된다.¹⁴⁾ 중요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군이 조직으로서 국가 통치의 전면에 부상한 현상이 아니라, 군사주의적 담론이 북한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당-군 관계라는 틀에서 보면 끊임없는 순환논리에 빠져버린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의 당-국가체제이며, 그것도 ‘수령’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당을 영도하고 있다. 따라서 당 이외의 그 어떤 조직도 당의 위상에 위협을 가할 수 없다. 그런데 군대라는 당과는 구분되는 조직이 득

12) 이종석,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대남전략”, 『남북협력과 국가안보』(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 1998. 11. 14), 7쪽.

13) 물론 이 두 글은 무려 2년여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군사 국가화 경향에 대한 이종석의 인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14) 1981년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쿠데타 정도가 성공한 쿠데타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을 동원한 쿠데타였던 것이다.

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위기라는 맥락에서 당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그렇지만 군대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군대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전통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 사회주의 건설기를 거치면서 당과 자연스럽게 일체화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와 같이 당-군 관계라는 도식 속에서는 군의 부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한 연구자는 당-군 일체화론이 학문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 그러나 분석의 대상이 연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당-군 일체화론이 북한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설로 존재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그가 지적한 대로 당-군 일체화론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논거를 가지고 이 (논의의) 광장에 들어” 오고, 이를 통해 북한의 정치와 정책을 설명하는 데 유용성이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했을 때 정권 형성사의 측면에서 당과 군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조직일 뿐 일체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한다. 위의 연구자가 제기한 인민군과 노동당원의 규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반론의 논거이다.¹⁶⁾ 북한은 1956년과 1967~1969년에 걸쳐 당과 군 모두에서 김일성과 무장투쟁을 함께 했던 빨치산 일색으로 권력 구조를 재편했다.¹⁷⁾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당과 군의 요직을 차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빨치산의

15) 양현수, “김정일 시대의 조선인민군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비평”, 9쪽.

16) 양현수는 “어떻게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200만 명이 넘는 노동당과 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일반적으로 노동당원의 수는 3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군 100만 명 중에는 당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가 제시한 40만 명 정도의 장교들은 당원이며, 그 외에도 중사 이상은 대부분 당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멤버십의 중복으로 이미 일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17)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통일문제연구』 8권 2호(1996); 유영구, “북한의 정치 - 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4권 3호(1997).

경험을 신화화하고 체제를 운영하는 규범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 일체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군사 국가의 개념 규정

국가는 어떤 정의에 따르더라도 기본적으로 강압과 동의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구성되는 조직체이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인민들이든, 개인이든, 계급이든, 민족이든, 외국이든 그 어떤 대상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는 국가 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통제함으로써 공동선을 구현하는 존재인 것이다. 보호와 통제는 권력을 수단으로 하여 가능하며, 근대 국가에 이르러 권력은 매우 정교한 형식을 띠게 되었다.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는 전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고도로 집중화된 권력 배분 양식을 개발하여 장착하게 되었고, 당이라는 정치조직이 국가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 역시 국가라는 외피를 뒤집어썼을 뿐 강압과 동의라는 필수적 구성 요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강압이 단순히 물리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듯이 동의가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강압은 군대나 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에 의해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가 엄청난 예산과 잘 갖추어진 조직체계, 그리고 첨단화된 장비를 장착한 군대나 경찰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님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대로 억압적 국가기구가 방대하게 갖추어져 있던 소련 및 동구 국가들이 1989년에 힘없이 몰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의 역시 완벽한 의미의 자발적 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민들이

적절하게 동의를 표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동意的 효과는 커질 수 있다. 요컨대 강압과 동意的은 상호연관되어 작용할 때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 국가는 단순히 군대의 규모가 크고, 군인들이 정치와 경제 등 다른 부문에 관여하는 폭이 넓고, 대외적으로 호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릴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들은 군사 국가가 드러내는 부분적인 모습일 뿐 이러한 징후가 보인다고 다 군사 국가는 아닌 것이다. 예컨대 과거 한국을 포함한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군부 독재 국가들이 이러한 현상을 노정했지만 이들을 (군사 정권의 범주에는 속할지언정) 군사 국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북한을 포함하여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당이나 정부기관의 상당 부분이 군사조직으로 되고, 고위 간부가 군복을 착용하고 군율에 복종하며, 또 대내적인 경제 건설에 있어 군사적인 메타포어를 사용하고 대외적인 행동에 있어서 군비 경쟁 혹은 전쟁 위협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의 공통된 성향”¹⁸⁾이라는 점에서 단지 이러한 측면을 들어 공산 국가들을 군사 국가로 규정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도의 문제가 개재한다. 그러나 정치적 현상을 정도의 문제로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군사 국가에 대한 개념화를 위해서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보다 이스라엘의 경험이 더 적실성이 있다. 북한과 유사하게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강력한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작은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북한은 공통점이 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적대적인 국제 환경에 직면하여 군대가 발전과 통합의 역할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고, 그 역할을

18) 양현수, “김정일 시대의 조선인민군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비평”, 3쪽.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였다. 또한 군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대인 이민자들을 흡수하고, 다양한 출신의 유대인 집단들의 용광로(melting pot) 역할도 수행했다. 심지어는 훌륭한 시민을 교육하고 애국심을 조장하는 교육·문화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군대가 권력을 장악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군사 민족(국가)(nation-in-arms)”이기 때문이다.¹⁹⁾

여기서 군사 민족(국가)은 민간 부문과 군사 부문 간의 경계가 “파편화(fragmented)”되어 있다. 이러한 파편화된 경계로 인해 두 부문(과 두 부문의 엘리트들)이 광범위한 상황에 걸쳐서 상호작용하며, 게임의 규칙에 대해 합의한 후 상호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혜택을 얻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가 건설 과정에서 군대의 역할과 개입이 확대, 즉 민간 부분의 군사화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민간인들이 군사 부문에 대한 영향력과 개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일종의 군대의 민간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군사 민족(국가)은 민간제도와 군사제도 간의 차이를 없애고 하나의 존재태(entity)로 전환시키는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메커니즘으로 규정된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 국가는 국가 운영을 위한 규범과 의식, 절차, 관행 등 제도적 틀이 군사문화 또는 병영문화에 토대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군사 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강압의 요소와 동의를 요소가 모두 다 군사문화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권력은 문화와 의식의 세계에 의해 좌우된다. 즉, 동의를 재생산에 의해 지탱된다. 군사 국가는 바로 이 동위의 영역조차도 군사주의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19) 이에 대해서는 Uri Ben-Eliezer, “A Nation-in Arms : State, Nation, and Militarism in Israel’s First Year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April 1995)를 참조하였다.

20) *ibid.*, p. 284.

인민들은 지도자의 정당성이나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군사적 논리와 의식을 동원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한 논리와 의식이 국가에 의해 조작되어 주입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는 불필요하다.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인민들의 지지를 동원하면서 동시에 억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 국가는 단지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군부 정권(military regime) 또는 군부 통치(military rule)와는 다르며, 군인들의 위상 제고, 역할 다변화, 체제유지의 기능 강화 등이 군사 국가의 준거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당과 군대 간에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하는 논의는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국가가 군사 국가화되어 있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 위에서 지적한 대로 군사 국가는 국가 운영을 위한 규범과 의식, 절차, 관행 등 제도적 틀이 군사문화에 토대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는 정책 방향이 어떠한데 간에 - 예컨대 호전적이든 유희적이든 -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다.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위기가 종식되고 나서 정상화의 길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러한 예는 거의 없다. 예컨대 히틀러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은 패전과 지도자의 사망을 계기로 각각 정상화되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종석이 말하는 “기형적인 상황”은 그의 표현대로 제도화되어 있거나 제도화의 길로 이미 들어섰으며,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위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이유가 중요한 논거가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군사 국가화 경향은 일종의 예외국가의 등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북한 정치구조의 변화과정이 정상국가로의 회귀보다는 일종의 예외국가의 고착 또는 예외국가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외국가 개념은 폴란츠스(Nicos Poulantzas)가 말하는 대로 자본주의 위기시 등장하는 위기관리적 성격을 갖는 국가이다. 그것은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분리하고, 지배계급이나 분파로부터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는 국가이다.²¹⁾ 폴란차스의 개념이 북한에 정확하게 부합되지는 않지만, 정치적 위기와 혁명적 상황을 구분하여 정치적 위기시에 국가가 자신의 모습을 변용시키는 동시에 정권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는 논리는 북한에도 원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폴란차스는 예외국가에 하위 정권 형태로 보나파르티즘, 군사독재, 파시즘을 열거했지만 북한의 경우는 보나파르티즘과 군사독재가 결합된 수정된 형태의 예외국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군사 국가의 답론 : '강성대국'과 '선군정치'

위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군사 국가화는 첫째, 당 및 국가기관에서의 군의 비중 및 서열 상승, 둘째, 대규모 승진 인사, 빈번한 군부대 방문 및 현지도 등 김정일의 군에 대한 우대정책, 셋째,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군사 국가화의 징후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군사 국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군사 국가화의 필수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어쩌면 군사 국가화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군사 국가화를 제기했던 논의들은 가시적이고 결과적인

21) Nicos Poulantzas, *Fascism and Dictatorship*(London : Verso, 1970), p. 313. 이에 착안하여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 글이 류길재,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한계”,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1호(1999)이다.

징후들만으로 군사 국가화를 입증하려 했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군사주의화(militarization)의 정도를 따질 때 흔히 제기되는 GN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총인구에서 군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군사 국가화의 필수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군사 국가는 강압과 동의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주의적 담론을 전사회적으로 유포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의 연대화(regimentation)를 통해 오래전부터 구축되었다. 단지 군사주의적 담론을 세련화시켜서 유포시키면 된다. 또한 그러한 담론을 추출하기 위한 자료로서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라는 귀중한(?) 보고(寶庫)를 갖고 있다.²²⁾ 북한에서 군사주의 담론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북한은 군사주의적 병영 국가의 은유와 구호를 즐겨 구사하고 있는 사회이다. 1960년대 후반 와다 하루끼가 말하는 ‘유격대국가’가 형성된 다음에 양적·질적인 변화를 목도할 수 있었으며,²³⁾ 보다 구체적인 계기는 1978년 북한이 조선인

22) 1991년 12월에 최고 사령관직에 오른 김정일은 1992년 2월 4일 당중앙위 간부들에게 한 연설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해, 즉 조선인민군 창건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한 ‘교시’를 내린다. 그는 이번 열병식이 “내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된 다음 처음으로 하는 열병식인 것만큼 우리 식으로 독특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는 열병식을 할 때 처음에 보병중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기계화중대가 나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관례에서 벗어나… 인민군대의 특성에 맞게 우리 식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인민군대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므로 “우리 인민군대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 열병부대를 항일혁명투사중대와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로병들의 중대, 만경대혁명학원중대, 현역군인중대, 로농적위대중대, 붉은청년근위대중대로 편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그의 ‘교시’는 자신이 오래 전부터 강조해온 대로 “정권은 무력에 의하여 보위”되며, “이것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 확증된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9쪽.

민군의 창건일을 1932년으로 소급 적용하던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북한의 군사 국가화 경향은 1991년 김정일의 최고사령관직 승계와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악화에 의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996년에는 ‘군사중시’, 1998년에는 ‘선군정치’ 담론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분명히 북한은 군사주의적 담론의 유포를 통해 인민들에 대한 강압과 동의기제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북한의 정치 담론중 가장 주목할 만한 구호인 ‘강성대국’과 ‘선군정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군정치’는 북한이 군사 국가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징후로 읽힌다.

1) 강성대국

강성대국이라는 구호는 우리 사회에는 1998년 8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알려졌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1990년대 전반기 언젠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대외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표방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로 해석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이 용어는 북한의 공간물에서 요란하게 선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왜 1998년인가? 북한에서 1998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경제난의 가중과 외교적 고립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 정권의

23) Haruki Wada,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ulture of the Kim Jong Il Regime :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1998. 5. 28~29).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상황을 안겨 주었다. '우호가격'에 기반한 경제적 지원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대외무역시장이 더욱 협소하게 됨으로써 북한 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미 북한은 내부 자원에 의해 유지되는 자립적 민족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흔히 지적되는 내부 자원의 고갈은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에너지와 기계, 원료 등은 오래 전부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조달 받고 있었으므로 북한 자체의 자원이 경제난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더욱이 1994년부터 시작된 냉해와 수해 등 자연재해는 농업생산을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특히 1995년의 대홍수는 북한을 기아와 죽음의 행행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고난의 행군'은 1930년대 김일성이 이끌던 빨치산들의 시련을 그린 다분히 감상주의적인 색채의 구호였지만 1990년대 북한의 현실은 그다지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300만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지만, 그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대규모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다.²⁴⁾ 이러한 재난의 기간은 1997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다. 비록 북한 당국이 1998년부터 '고난의 행군' 대신에 '사회주의 총진군'을 제시한 것은 앞선 시기보다 상황이 다소 호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희망적인 구호가 필요하다는 의도에서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 '사회주의 강행군'이라는 구호는 1950년대 후반 북한 경제의 전인차가 되었던 천리마운동 당시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북한이 1950년대의 북한과 같을 수는 없으며, 현실과 유리된 구호는 그저 구호일 뿐이다.

24) 필자가 1997년 8월, 1999년 7월, 2000년 7월 조·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의 남양, 회령, 무산, 혜산 등에는 새로이 조성된 대규모의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강행군’이라는 구호가 열렬히 제창되고 있을 즈음 북한 당국은 ‘강성대국’이라는 구호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²⁵⁾ 그러나 그 시점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여 지구 궤도 위에 자체 제작한 광명성 1호 위성을 성공적으로 올려놓았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고,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이 추대되었다. 주석직이 폐지되고, 실질적인 국가수반인 국방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김일성의 유훈통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강성대국’이 공간물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초였다. 1998년 초 『로동신문』은 “‘백두의 붉은기정신’으로 사회주의 강행군을 다그치고 있다”고 말하고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그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기어이 우리 조국을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빛내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²⁶⁾라고 강조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사회주의 강행군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주체의 강성대국’은 사상과 정치, 군사에서도 최고이고 경제와 문화에서도 최고이며 도덕의리에서도 최고인 인류의 이상국”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리념과 령도로 하여 우리 나라는 이미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전변”되어 지금은 “여러해 계속된 ‘고난의 행군’의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 인민경제를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²⁷⁾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당시부터 사상과 군사강국에서 출발하여 경제건설

25)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정론. 그 이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사설에서 보다 체계화시켜 나갔다.

26) 김진국, “백두의 붉은기정신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혁명정신”, 『로동신문』, 1998년 1월 18일.

27) 정관룡·진웅,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꽃피워 나가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로동신문』, 1998년 7월 12일.

을 이룩하는 것이 강성대국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강성대국의 의미를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강성대국’의 의미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한 것은 1998년 8월이었다. 이때에 와서 강성대국은 “말그대로 국력이 강성하여 나라의 위력이 최대한 높이 발휘되는 불패의 나라”를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주체사상이 정치와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꽃피어나 나라의 위력이 최상의 높이에서 발양되는 나라”이며 “우리 조국을 사상과 정치, 군사의 강국일뿐아니라 경제의 대국으로, 통일된 조국으로서 무한대한 국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한다는것”²⁸⁾이라고 함으로써 강성대국을 사상, 정치, 군사, 경제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들어오면서 사상, 정치, 군사, 경제에 과학중시사상을 포함시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과학의 중요성까지 강조하게 되었다.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한마디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강성대국의 최고원리는 김정일을 영원한 국가수반으로 모시는 것이며,²⁹⁾ 따라서 유일한 사상적 기치는 김정일의 사상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위민위천(爲民爲天)사상, 인덕(仁德)정치 등의 사상적 업적을 제시하면서, 특히 조국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후계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해 놓은 것을 김일성의 최대 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³⁰⁾ 이러한 김일성의 노

28) 김진국, “주체의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4일.

29)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정론. 이 글에서 “걸출한 수령, 위대한 애국자, 강철의 령장을 영원한 국가수반으로 모시는 것은 사회주의자주강국건설의 생명이며 최고원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30)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10월 10일 사설. 이 사설에서 북한은 “특히 조국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령도의 후계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해 놓으신 것은 수령님의 최대의 공적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력은 부강조국 건설로 지향되는 것이며, 그의 후계자 김정일은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³¹⁾라는 구호를 제기함으로써 유훈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훈통치의 표현들은 1999년 이후에는 그 사용이 절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9년 신년사는 김정일의 사상과 정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혁명적 국가기구체계가 정비되었음을 강조하고 김정일 사상으로 일색화된 주체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김정일의 창조철학인 강계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인 ‘혼연일체’³²⁾ 등을 강조하면서 정치·사상적 순결성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를 대신한 공동사설에서도 ‘당=수령’이라는 등식을 내세워 당 건설과 군 건설, 경제건설을 오직 김정일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시행하라고 주장하였으며³³⁾ 이를 통해 침체되었던 당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치체제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사상의 순결성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 되는 자주성,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 되는 일심단결, 반제혁명정신,³⁴⁾ ‘부강조국 건설의 최대의 원칙’인 자력갱생, ‘항일혁명투사들의 최대의 유산’인 수령결사옹위정신 등의 사상으로 전 주민을 일색화하는

31)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강성대국건설의 원리를 밝혀 주시여”, 『로동신문』, 1998년 11월 3일.

32)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1999년 2월 16일 사설. 이 사설은 특히, ‘혼연일체’를 “령도자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 주고 인민은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는 영원한 운명공동체”로 설명하고 있다.

33)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 자”,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2000년 1월 1일 공동 사설.

34) “제국주의자들과 싸운다면 싸우고 이긴다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반제혁명정신이다”, “주체의 강성대국은 위대한 사회주의사상강국이다”, 『로동신문』, 1998년 11월 30일.

것이 강성대국건설의 정치·사상적 기치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정치·사상적 강국을 기반으로 하여 군대를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하는 것이 강성대국 건설의 방식이며,³⁵⁾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치는 것을 강성대국에 도달하는 투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상과 정치의 강성대국 건설은 김일성 시대와의 연결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위한 예비적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 담론은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수령’ 김정일을 최고지도자로 하면서 국내적 단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상과 정치이다. 그러나 총체적 위기 상황인 김정일 시대는 사상과 정치만으로 개창될 수 없다. 군사와 경제의 강국을 표방함으로써 김정일 시대가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새로운 담론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은 사상과 정치를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사상·정치 중심의 국가운영 기조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로 군사와 경제를 덧붙이게 된 배경이다. 따라서 사상 및 정치에 있어서의 강성대국은 과거의 구호가 아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의한 혁명영도로 위기 상황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강성대국은 선군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며 이를 제기하는 모태가 된다.

35)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정론. 이 정론에서 북한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건설방식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선군정치

북한은 1998년 4월 25일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군정치’에 대해 언급한 이후 계속해서 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³⁶⁾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의 정론 “강성대국”을 통해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강성대국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쥐는 것으로 된다”고 정치·군사 중시 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강성한 군력을 떠난 강성대국이란 사상루각과 같다고 보신다”³⁷⁾라고 인용함으로써 군사의 강성대국은 북한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사회주의 “군사강국의 제일 기둥”,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로 표현하면서, 그들은 “백두산 3대장군의 기질”, “세계 유일 초대국도 내려다보는 만만한 뱃심”,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 “원수들과 단호히 결판을 내고야 마는 무자비성” 등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군인정신은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의 결실이며 인민군대는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더욱 다져 김정일 제일승배자, 김정일 제일결사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⁸⁾ 또한 군사의 강성대국을 위하여 “전체 인민들은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온 나

36) 1998년 4월 25일 군창건 66돐 기념사설에서 김일성의 군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그리고 김정일의 군사상을 ‘군중시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총대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로동신문』, 1998년 4월 25일 사설.

37) “강성대국건설의 원리를 밝혀 주시여”, 『로동신문』, 1998년 11월 3일.

38) “강성대국건설을 군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 『로동신문』, 1999년 1월 5일. 여기서 김정일은 인민군대에 대하여 “인민군대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전투준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집중하며 전투정치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전투정치 훈련을 강조하였다.

라를 소왕청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960년대에 제기된 4대 군사 노선인 ‘전인민의 무장화’와 ‘전지역의 요새화’를 김일성 시대에 이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2000년 공동사설에서도 ‘총대중시사상’은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 해야 할 국사 중의 제일국사”이며 “인민군대는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김정일 결사옹위를 촉구하며 향후에도 군 중시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딸라’와 ‘폭탄’의 힘을 앞세워 조선민족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초대국’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덤벼든다면 일격에 원수들의 아성을 폭파”³⁹⁾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의 강성대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고슴도치’의 공격적 방어와 같이 외부의 강압에 대한 공세적 방어전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의 강성대국을 위하여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와 ‘총대중시사상’ 등의 사상적 측면만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방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⁴⁰⁾ 따라서 군사의 강성대국은 현실적으로 군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인민군대에 대한 확실한 통제만이라도 확보하자는 선언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인민군이 북한체제를 보위하는 최고 집단임을

39)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2000년 1월 1일 공동 사설.

40) “주체의 강성대국은 위대한 사회주의사상강국이다”, 『로동신문』, 1998년 11월 30일. 여기서 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군사강국이란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반제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군대와 인민이 지켜선 나라, 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나라이다”고 군사의 강성대국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는 언술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인민군대의 총창 위에 당과 국가가 있다”라든가,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구호는 북한의 군대가 단순히 물리적 억압기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당간부들 앞에서 행한 비밀 연설에서 김정일은 당의 사업이 인민군대의 당 사업보다 못하다고 질책하면서 군의 일사불란함과 충성심을 본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⁴¹⁾

다른 한편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군과 관련된 행사를 과거에 비해 대폭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군지도자들의 권력 서열이 상승하고 있다. 차수급 간부들의 서열이 부총리급보다 앞서 있다. 물론 북한에서 권력 서열은 큰 의미가 없지만, 군간부들에 대한 예우가 향상되었으며, 군대를 전면에 내세워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비록 이러한 징후가 과거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현상이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이 199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군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이후 북한은 이른바 ‘군민일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의 군대 원호사업으로 집약할 수 있는 이 운동은 군과 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으로 이해되는데, 북한은 이 운동의 연원을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시절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언급했다는 데서 찾고 있다. 군민일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1992년 3월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군민일

41) 『월간조선』, 4월호(1997)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치모범군(시·구역) 칭호를 제정하였다. 군민일치모범군 칭호는 시·군·구역을 단위로 인민군대 원호에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게 중앙인민위원회(1998. 9.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수여하는 명예칭호이다. 북한은 이 칭호 쟁취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 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기관·기업소·학교 등에 최고사령관 명의의 ‘감사문’을 전달하고 있다. ‘군민일치모범군’ 칭호 쟁취운동은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보급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부대를 지원 및 위문토록 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사회주의 경쟁운동처럼 군(郡)별 노력경쟁운동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해당 지역의 학교와 군부대를 결연시키는 ‘우리학교 - 우리초소’운동을 추진하였고, 이를 최근 각급 학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군(郡)을 기초로 한 행정단위 내의 각급 기관·공장·농장 등으로 확대하여 군당위원회 지도하에 군(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다시 북한 전역에서 ‘우리마을 - 우리초소’, ‘우리공장 - 우리초소’, ‘우리농장 - 우리초소’운동 등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군인봉사정류소를 설치하여 공무로 이동하는 군인들을 위해 특별히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강원도 안전국의 ‘군인봉사정류소’ 설치를 “군 - 민일치” 사례로 치하하고 감사문을 보냈으며, 이 전달식에는 강원도 당 및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한다.⁴²⁾

이러한 운동 또한 1990년대에 처음으로 창안된 것은 아니다. 1970년대부터 착수된 이러한 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강도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선군정치’라는 구호를 제기하면서 과거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군사주의적 작풍을 새롭게 해석하고 군사주의를 사회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42) 『내외통신(종합판)』(1998. 1. 1~3. 31), 471~472쪽.

1997년경부터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등지에 군인들을 파견하여 경계를 서거나 관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도 군대가 사회와의 구분을 없애고 군사주의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4. 군사 국가와 정책결정구조

군사 국가의 중요한 특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군 간부들의 의견이나 군사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이 자주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식의 표현을 구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사적인 고려가 정책을 결정할 때 최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방위원회에 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설과 군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반증하는 논거 등 상충하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상회담 국면에서 이 조직이 기존의 당 정치국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기구가 단지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위상을 보좌하기 위한 것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방위원회의 부상은 기존의 당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 이른바 비상설 조직체계가 유명무실화된 현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비상설 집단지도 및 협의체계가 당규약상 각 수준에서 외형상으로는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비상설 조직체계보다는 비서국이나 전문부서들과 같은 상설조직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군(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통제는 확고하다고 한다.⁴³⁾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인민군에는 각급 단위마다 당조직이 조직되어 있으며,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바로 이 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당규약에 규정되어 있다(47조). 그러나 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비상설 조직이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상설기구로서 총정치국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정치국은 당으로 말하면 비서국과 같은 존재가 된다.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지도를 받고 있으니 말하자면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의 정점에 해당된다.

조선노동당은 당 자체의 사업이나 인민군대 내의 사업이나 이와 같이 상설적인 조직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이뤄진 1970년대부터의 현상이다. 1967년 박금철과 이효순이 숙청된 제4기 1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당중앙위원회와 정치국(당시에는 정치위원회)은 서서히 정책결정의 권한을 삭감당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김일성은 김정일에 비하면 “고전적인” 사회주의자였다. 레닌이 생전에 당에서 형식적인 리더십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당의 집단지도체계의 표상인 당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⁴⁴⁾ 이는 당중앙위원

43)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 정치’와 당·군 관계”;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참조.

44) Paul Brooker, *Twentieth-Century Dictatorships : The Ideological One-Party States*(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p. 66.

회와 정치국과 같은 비상설 조직체계가 고전적인 사회주의 당 - 국가체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집중제 조직원칙의 핵심임을 말해준다. 비서국이나 전문부서는 “다기능 조직”(multi-functional organization)인 공산당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행부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정책결정은 어디까지나 비상설 조직체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연구들에서 당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당 - 국가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에서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 정책결정기구였던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이 유명무실화되고 일종의 “원로회의체”와 같은 기구로 전락했음에도 정책결정에 공백이 없는 것은 이를 대체하는 다른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조직이 바로 국방위원회이다. 물론 국방위원회는 당기구가 아니라 국가기구이다. 그러나 이는 중요하지 않다. 국방위원회가 당기구냐, 국가기구냐 하는 구분은 외부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것이지, 북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기구든간에 김정일이라는 최고지도자와 사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⁵⁾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면 그것이 국가기구든, 당기구든 상관없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북한에서는 “국가기구자체를 군사체제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체제에서 군사를 우선시하고 군사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권능을 규제한 정치체제”라고 말한다.⁴⁶⁾

우리는 이 기구의 명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에 의해 창안된

45) 이 점에 대해서는 류길재,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한계”, 22~23쪽을 참조할 것.

46)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평양 : 평양출판사, 2000), 24쪽.

기구와 같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스탈린은 2차 대전기간 중 당 정치국, 조직국, 비서국 등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기구로서 ‘국방위원회’(State Defense Committee)를 설치하여 경제관리 및 후방공급을 담당케 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당의 하부조직을 포함한 모든 소련의 기관이 종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최고사령관인 스탈린은 최고사령부를 두어 실질적인 군사작전을 지휘하면서 자신의 개인사무실로 사용하였다.⁴⁷⁾ 오늘날 김정일 갖고 있는 세 가지 직책을 스탈린이 모두 갖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일까? 그러나 이러한 전시체제적 성격은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야 정상화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이 북한의 경제난이 호전되면 다시 과거의 당-국가체제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가 성격이나 이에 기반한 제도적 운용이 쉽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북한의 군사 국가가 추구하는 바는 전시 상태와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치적 기반은 기존의 당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겠지만 경제난과 식량난이 초래된 상황에서 기존의 명령경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보급이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만주 항일 투쟁시절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유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유격대 정신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군대는 집단성, 효율성, 상명하복의 충성심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다.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에게는 당이든, 군이든, 정부기구든 필요하면 그 중 어느 한 부분을 부각시켜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원이 있다. 그 권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바로 군을 부각시키

47) Jerry F. Hough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Cambridge and London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는 군사 국가화이었던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앞서 밝힌 대로 국제 환경적 상황을 포함한 객관적·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앞서 지적한 국가의 성격과 정치 제도의 제약을 벗어나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국가 행위자)의 의도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역시 국가의 성격과 정치제도의 제약 하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의 정책 정향도 제도적 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제도적 틀을 설정할 때 이미 자신의 협애한 이익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국가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치적 대응을 시도한다. 이 경우 최우선적인 목표는 권력의 유지와 권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 틀의 보존이다. 더구나 통치자와 국가가 일체화되어 있는 북한의 경우 지도자의 의도는 곧 국가의 의도로 파악될 수 있다. 물론 사소하지만 기술적인 차원에서 최고 통치자인 김정일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 그의 퍼스널리티 분석이나 심리학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예외 국가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함으로써 정권 안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정책도 가능하다. 강력한 적에 의해 둘러싸인 유격대가 취해야 할 전술은 생존이며, 생존을 위해서는 정규군의 교범은 성가신 존재일 뿐이다.

5. 결론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당-군 관계는 비공산권 국가의 민-군 관계와는 다르다. 그것은 제로섬적인 관계에 있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라기보다 같은 목표와 이념을 가진, 그러나 기능이 분화된 쌍생아적 성격을 갖는 관계이다. 군이 얘기하자면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당의 역사와 군의 역사가 일치한 아시아 공산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격이 보다 부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에서 부상하고 있는 군의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가 당과의 관계에서 우위/열위의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군이 당보다 우위에 설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당이 전사회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군이 당에 대해 배타적인 존재로서 당을 위협하는 존재로 전환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북한의 군사 국가화 논의는 드러나는 현상을 갖고 전제가 부정되는 결론에 이르는 셈이다. 즉,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라고 북한을 규정하게 될 때 그 전제인 당의 지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체제를 새로이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당-군 관계를 이분법적 갈등 구도로 보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민-군 관계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민간 정치 부문과 군사 부문이 배타적인 이해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당과 군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당-군 관계가 갈등적일 수는 없다. 그것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갈등적일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제도적으로 당과 군이 일체화되었기 때문에 갈등적일 수 없다는 의미

이다. 북한의 당과 군은 국가 건설기 잠시 동안 형식적인 구분이 있었을 뿐 당-군 일체화를 표방해 왔고, 제도적인 수준에서 공고화되었다. 이는 연이은 군부에 대한 숙청 과정을 통해서 더욱 강화·고착되었다. 따라서 당-군 관계의 갈등적 성격이 내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최고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화되어 온 1970년대이래 그를 정점으로 하는 정책결정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의 위상 강화는 권력의 사인(私人)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에서 성장하고 당을 장악·지도한지 30여 년에 이르는 김정일에게 군대의 위상 강화는 당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없다. 그에게 군대는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원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 위기가 가중되면서 군대는 단순한 물리력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동의를 창출하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북한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항일 빨치산 투쟁으로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안보적인 위기의 상존이라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군대가 억압과 동의를 창출하는 도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김진국, “백두의 붉은기정신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혁명정신”, 『로동신

- 문』, 1998년 1월 18일.
- _____, “주체의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4일.
-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 정관룡·진웅,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꽃피워
나가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로동신문』, 1998년 7월 12일.
-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정론.
- “강성대국건설을 굳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 『로동신문』, 1999년 1월
5일.
- “강성대국건설의 원리를 밝혀주시여”, 『로동신문』, 1998년 11월 3일.
-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2000
년 1월 1일 공동사설.
- “우리 혁명무력은 총대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로
동신문』, 1998년 4월 25일 사설.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10월 10일 사설.
-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1999년 2월 16일 사설.
- “제국주의자들과 싸운다면 싸우고 이긴다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경애
하는 장군님의 반제혁명정신이다.” “주체의 강성대국은 위대한
사회주의사상강국이다”, 『로동신문』, 1998년 11월 30일.
- “주체의 강성대국은 위대한 사회주의사상강국이다”, 『로동신문』, 1998
년 11월 30일.
-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해나갈 것이

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강성대국건설의 원리를 밝혀 주시
여”, 『로동신문』, 1998년 11월 3일.

<2차 자료>

- 류길재,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한
계”,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1호(1999).
-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통일문제연구』 8권 2호(1996).
- 양현수, “김정일 시대의 조선인민군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비평”(한
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원고, 1999년 9월 18일).
- 유영구, “북한의 정치 - 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4권 3호(1997).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
계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명우, “김정일체제하의 당·군관계에 관한 연구”(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이종석·백학순 공저, 『김정일시
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 세종연구소, 2000).
- _____,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대남전략”, 『남북협력과 국가안보』(한
국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 1998. 11. 14).
-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
제7권 3호(성남 : 세종연구소, 2001).
- Ben-Eliezer, Uri, “A Nation-in Arms : State, Nation, and Militarism in
Israel’s First Year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April
1995).
- Brooker, Paul, *Twentieth-Century Dictatorships : The Ideological One-Party States*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 Colton, Timothy and Thane Gustafson(eds.), *Soldiers and the Soviet State : Civil-Military Relations from Brezhnev to Gorbachev*(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Hough, Jerry F.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and London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Janowitz, Morris, "Military Institutions and Citizenship in Western Societies", *Armed Forces and Society*, Vol. 7(1976).
- _____, *The Reconstruction of Patriotism*(Chicago : Universtiy of Chicago Press, 1983)
- Poulantzas, Nicos, *Fascism and Dictatorship*(London : Verso, 1970).
- Wada, Haruki,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ulture of the Kim Jong Il Regime :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1998. 5. 28~29).

(Abstract)

The Rise of an 'Exceptional State: Militarism and the Expanded Role of Korean People's Army in North Korea

Kil-Jae Ryou (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phenomena of *Sonkun Jongchi* [Military First Politics] has influenced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Since the mid 1990s, Pyongyang has emphasized militaristic slogans, such as Military First Politics, which allow the military, the Korean Peoples Army, to lead and rule the country. The Military First Politics is applauded as a distinct philosophy grounded in the teachings of Kim Jong Il,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and is said to be the most efficient and necessary policy line to protect a country ensnared in severe hardships.

It is arguable that North Korea has shifted from a party-dominated state to that of military domination.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has enormously increased its influence as well as multiplying its role, so that its power and authority have overwhelmed the party and replaced the party, so much so that it is the only supporting force for the Kim Jong Il regime.

However, this view has been recently refuted. Although the position of the KWP has improved, it is nothing but the military being a member of the socialist party-state system, in which the military should obey party guidelines, and party organs within the military supervises and controls the military.

This paper argues that the North Korean state is a militaristic one not because the military outgrew the party but because the whole society is dominated by the militaristic discourse, the government acted on the militaristic logic, and the boundaries between society and the military became ambiguous. It is obvious that the military is controlled by the party, but the latter did its job according to the former's logic.

Key Words: Exceptional State, Militarism, North Korea, Party-Military Relations